SUMMA
Seoyoung Industrial Development / Seoyoung Engineering

경기신문 인천

kgnews.co.kr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단기 4354년 (음력 10월 26일)

대표전화 032)442-8114 제5101호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살기 좋은 도시
불평등은 완화 · 도시혁신은 가속화

쪽지·셀프예산 근절?… "계수조정 공개해도 여전"

[기획] 계수조정회의, 이제는 투명하게

4. 만만치 않은 반대 의견

소소위 '깜깜이 예산' 원흉으로 지목
실효성 부족하고 의정활동 위축 시켜

지난 8월 9일 인천시의회에서 진행된 272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인천시의회 제공

2019년 12월 6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례 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이듬해 본예산안에서 일부 민생·복지예산이 전액 삭감된 반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시 출연금은 70억 원이 113억 5000만 원으로 65% 늘어나는 등 인천시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

쪽지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중구 영종도 20억 원짜리 하늘·바다길 조성사업과 계양구의 계양산기 양궁대회 5000만 원 등 57개 사업이 예결위에서 추가됐다. 모두 계수조정회의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다른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했고, 결국 엿새 뒤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과했다.

안병배 의원(중구1)은 "당시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누더기 예산을 만들었다"며 "초선의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여기저기서 흔들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안 의원은 계수조정회의 공개에는 반대한다.

그는 "계수조정에선 합의되지 못한 예산을 다룬다"며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정치력이 필요한 자리"라고 했다. 이어 "정치는 논리만으로 되지 않는다. 감정에도 호소하고 의지를 앞세워 밀어부치기도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모 의원(남동4)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찔러 넣는 쪽지·셀프예산은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해도 막을 수 없다"며 "국회도 속기록으로 계수조정을 공개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도 매년 예결특위의 이른바 '소(小)소위'가 논란이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3인으로 구성돼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는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다 보니 회의록도 남지 않아 '깜깜이 예산'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준 의원(미추홀1)은 "특혜성 사업을 저지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회의 내용 전체 공개는 불필요한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시의회 예결위는 소위 체제가 아니어서 국회와 개념이 다르다"며 "비공개 간담회 형식의 계수조정회의를 공개한다면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수조정회의 공개에 부정적인 의원들도 예산 심사 과정과 결과의 공개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강원모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예산이 증액·감액·추가된 내용을 표시하고 이유까지 기록해 공개할 필요는 있다"며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용 기자

극지연구소 연구원 불륜·횡령·승진 관여 '시끌'

연구비 구입 공공물품 개인적 사용
같은 연구원과 수 년간 부적절 관계
민원인 "연구소서 사건 은폐" 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시끄럽다.

소속 연구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연구소 물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나온 탓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A(남)씨가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민원이 접수돼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불륜 상대인 같은 팀 소속 B(여)씨의 승진·논문에 관여했고, 재택근무 중 B씨와 사적인 시간을 보낸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9월 말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원에 따르면 초등학생 두 딸을 둔 A씨는 연구소 인근 오피스텔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수년 전부터 B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

A씨의 오피스텔에서는 연구소 집기와 실제 극지 기지에서 사용해야 할 각종 생활용품이 발견됐다. 또 A씨의 노트북에 B씨가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기 위한 이력서 등도 담겨있었다.

이밖에 A씨가 재택근무를 낸 당일 실제로는 B씨와 병원에 갔던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소는 해당 사건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두 달 동안 자체 조사나 징계조차 논의하지 않았고, 현재도 두 사람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구소 물품 유용, 재택근무 규정 위반, 승진·논문 관여 등은 알지 못했고 불륜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설 수 없었다는 게 연구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원인의 얘기는 다르다.

민원인 C씨는 "9월 말 해당 사건 이후 A씨의 부인이 극지연구소를 찾아 위법적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덮으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했고, 앞으로 특별감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승진·논문 관여 문제는 외부 인사와 함께 검증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소 물품 유용 등 문제는 발견 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

박남춘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문제없다"

환경부, 건폐물 연차적 반입 금지
경기·서울서 소각재 처리 여력 생겨

"수도권매립지 앞으로 문 닫을 일만 남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환경부가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빼면 소각재, 불연물만 남게 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90% 이상이 해결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한국건설자원협회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대형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건설폐기물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재 재활용 극대화 등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에 묻히는 폐기물이 현재의 5.8% 미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결국 남는 소각재 처리 문제도 서울, 경기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여력과 방식이 생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 매립지 조성도 실익이 없어 관련 논의가 끝난 것으로 본다"며 "환경부도 이에 맞춰 검토를 하고 있다. 12월부터는 소각재를 어떻게 줄일지 논의된다"고 덧붙였다. 정민교 기자

14 김석훈의 백령단상

15 강화군 해누리공원 준공

대한민국의 복지와 경제가 함께 크는 세상

LH경기지역본부
수의계약가능 토지 및 아파트 문의
LH경기지역본부 토지판매부 031-250-8401
주택판매부 031-250-4927
인터넷 lh청약시스템 | https://apply.lh.or.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편리하고 아늑한 공간, 따뜻한 사람들의 공동체,
어느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LH 경기지역본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경기지역본부